

大學財政難의 돌파구

宋 相 庸
(翰林大 史學科)

최근 몇몇 대학의 入試不正이 드러나면서 대학의 財政 문제가 제기되었고, 때맞추어 교육부의 기여입학제 검토 암시가 나오자 몇 달째 무성하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계기가 좋지 않았지만, 대학 안에서만 내연해 오던 이 문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일천한 우리나라의 대학은 동란의 폐허에서 일어나 눈부신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외국의 대학들과 견줄 때, 우리 대학이 양적인 팽창에 따를 內質을 이루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언젠가 캘리포니아대학의 예산이 우리나라 총 예산과 맞먹을 때가 있었다. 이런 미국 대학을 따라가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하거나 못한 나라 대학과의 비교는 의미가 있다.

한국과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臺灣의 대학이 오래 전에 월등히 높은 수준에 이른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한국외국어대 김우조 교수는 가난한 印度의 부유한 대학을 부러워하고 있다. 박사논문 심사료 250 루피(1만 원)를 냈는데 대학은 심사위원의 항공료로 3천 루피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나라의 기숙사 시설은 英國 수준임이 확실하다(서울신문, '90.10.20). 서울대 이인호 교수는 蘇聯 학자들이 찾아와 연구소를 보자고 했을 때 난처했던 경험을 털어 놓는다. 소문난 경제대국의 대학이 그토록 빈약한 것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圖書館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번듯한 도서관을 가진 대학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國費로 파견하는 교수들은 인문사회계의 경우 연구는 못하고 1년 내내 복사만 해 가지고 온다. 비참하고 창피한 일이다. 이상희 전 과기처장관은 한국이 기능 1위, 체육 4위, 경제 12위이나 과학은 40위라고 개탄했다. 대학을 評價한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40위를 훨씬 밑돌 것이 분명하다. 이토록 한국의 대학이 황폐한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싶다. 학생 등록금은 안 받으면서 거의 전부를 政府補助로 대학을 운영하는 유럽 대륙의 나라를 흉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보조가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 예산에서 敎育部門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 대부분이 초등교육에 쓰이고 있고, 大學敎育은 완전히 버림받고 있다. 이렇게 고등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2천년대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턱턱지 못한 예산 타령을 할 것만도 아니다. '80년대 이후 정부는 스포츠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올림픽도 유치하고 세계적인 스포츠강국을 만들었다. 교육과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스포츠 진흥에 힘

쓴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학교육을 방치한 채 스포츠 육성에만 열을 올렸다는 데 있다. 정부는 가열화되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는 관건이 교육에 있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投資 優先順位를 과감히 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을 지원할 財源을 찾는다면 반가운 조짐이 있다. 冷戰이 끝나고 남·북 간에 긴장이 완화되면서 군비축소는 불가피한 추세로 보인다. 내년부터라도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 그것을 전액 教育費로 전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교육 지원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企業이 대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많은 기업이 문화재단을 설립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의심스럽다. 장학금을 주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책을 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에는 몇몇 기업에서 도서관, 미술관을 세우더니 서울대에 복지 시설을 지어 주고 도서비를 대주는 등 고무적인 경향이 보인다. 이런 지원은 재정 압박이 심한 私立 大學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수한 대학을 골라 유망한 연구소 또는 학과를 집중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은 그 핵심 인력을 대학이 공급한다는 점에서 대학에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업은 대학의 발전을 도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이익이 기업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기업이 대학 지원을 產學協同과 연계시킨다면, 기업과 대학이 다같이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정부도 稅制上 惠澤을 주어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립대학 제단의 대부분이 부실하여 轉入金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능력이 있는 재단도 학생운동의 과격화로 학생들과 마찰을 빚게 되자 투자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교육 투자는 길게 보고 하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투자를 늘림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의 존경을 받는 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장해 오던 寄與入學制는 교육부가 긍정적인 검토로 방향을 바꾸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여지책으로 기부금 입학을 허가하려는 정부나 여론의 악화를 의식해 신중을 요구하는 여당의 입장은 모두 이해할 만하다. 찬·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반대 이유는 이 제도가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겨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할 지당한 의견이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여입학제는 위기에 처한 대학을 경제적으로 크게 도울 것이고 그 이득은 반대측이 염려하는 잃는 것에 견줄 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방 후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기여입학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지금도 많은 대학이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몰래 하는 것이 나쁘지 모든 것을 公開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 대학도 이제 입시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는 방식을 지양할 때가 되었다. 기부금은 합격을 위해 고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교육계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 총·학장들에게도 할 말이 있다. 총·학장은 높은 학식과 고매한 인격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미국의 대학 총장이 하는 일은 돈을 끌어오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한다. 한국의 대학 총·학장도 등창, 학부도, 기업을 찾아 다니며 학교 발전기금의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